

## 울 산 지 방 법 원

### 판 결

사 건	2017가단2051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공탁금출급권자 확인
원 고	A
피 고	1. B 2. C 3. 회생회사 AA 주식회사의 관리인 F1) 4. D
변 론 종 결	2017. 5. 23.
판 결 선 고	2017. 6. 20.

### 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00광역시가 2015. 10. 12. 울산지방법원 2015금제3940호로 공탁한 금 12,734,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.

---

1) 원고는 '회생회사 AA 주식회사'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, 소 제기 전인 2014. 7. 10. A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,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(제56조 제1항),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(제78조), '회생회사 AA 주식회사'는 '회생회사 AA 주식회사의 관리인 F'의 오기임이 명백하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 및 피고들(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에 대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)은 채무자인 H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(울산지방법원 2016타배588)의 이해관계인들이다.

나. 원고 및 피고들은 H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을 급식용 부식비 채권에 관하여 별지 채권자 목록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하거나 채권양도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결정문 및 채권양도통지가 별지 채권자 목록표 송달일자란 기재와 같은 일자에 울산광역시에 도달하였다.

나. 울산광역시는 2015. 10. 12. 위 부식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, 채권양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H, 피고 D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, 제291조에 근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3940호로 12,734,200원을 공탁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공탁금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취지

### 2. 주장 및 판단

#### 가. 원고 주장 요지

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D의 채권양도통지가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보다 울산광역시에 늦게 송달되어 채권양도가 무효인 바,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.

#### 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가 한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

제공탁과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.

그런데,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 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,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·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,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,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,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으로부터 추심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이 집행채무자인 H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그런데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인 H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하여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·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.

[나아가 덧붙이건대,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은,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 및 가압류결정 정본 등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. 또한

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야 한다.

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원고 및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울산광역시에 도달된 일자가 피고 D의 채권양도통지 일자보다 앞서므로, 이들의 채권가압류가 피고 D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하고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가압류 결정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할 것이다. 계산하면 원고는 5,633,683원[=12,734,200원  $\times$  {77,718,700원/175,672,886원(= 77,718,700원+11,758,386원+8,242,500원+77,953,300원)}, 원 미만 버림]에 대해 출급청구권을 가진다.]

### 3. 결론

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정덕수

### 별지 채권자 목록표

순번	채권자	유형	금액(원)	송달일자
1	원고	대구지방법원 2015카단3340호 채권가압류	77,718,700	2015. 7. 6.
2	피고 B	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카단423호 채권가압류	11,758,386	2015. 7. 27.
3	피고 C	울산지방법원 2015카단1856호 채권가압류	8,242,500	2015. 8. 7.
4	피고 AA의 관리 인 F	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카단152호 채권가압류	77,953,300	2015. 9. 1.
5	피고 D	채권양도	8,300,300	2015. 9. 14.